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7291.91	↑ 코스닥	794.00
	(+45.12)		(+9.00)
↑ 금리 (연이자율)	3.778	↑ 환율 (원/달러)	1510.40
	(+0.003)		(+11.90)

하이닉스 ADR 상장  
SK스퀘어  
재평가 기대감  
03



## 금리전망 쉬쉬하는 美 한은, 섣범 더 꼬인다

### 케빈 워시 체제 美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워시 의장 체제 첫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고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열었다. 연준이 물가 안정 우선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는 줄이면서, 완화 약세와 수입물가 부담을 안은 한국은행의 금리 섣범도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6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6월 회의에서 이미 금리를 올릴 근거가 있다고 봤고,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정책 힌트 줄이고 성명서는 '간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긴축 가능성 AI투자, 반도체 가격 올리는 '변수'

### ◆ 인하보다 인상 리스크

이번 의사록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 논의는 뒤로 밀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긴축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전면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결정 자체는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하지만 내부 논의는 성명서보다 매파적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망치를 제출한 18명의 정책 담당자 가운데 절반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절반은 동결 또는 인하를 지지했다. 워시 의장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

### ◆ 물가가 고용 늘렸다

연준 내부의 판단은 물가 쪽으로 기울었다. 의사록에는 가격 안정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고, 최대고용 달성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 하방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담겼다. 운송, 항공요금, 석유화학 제품, 농산물 투입 비용 등에서 가격 압력이 늘어났다는 언급도 나왔다.

새로운 변수는 인공지능(AI) 투자다. AP통신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와 컴퓨터 장비, 전력 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FOMC 의사록에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AI 투자 붐이 기술 제품과 전력 수요를 자극하면서 Fed에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이 대목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은 한국 수출과 성장률을 떠받치는 긍정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AI 투자 수요가 물가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에는 성장 호재인 반도체·AI 사이클이 미국 금리 측면에서는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 ◆ 길어진 한은의 고민

워시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변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줄이고, 정책 성명서를 더 간결하게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수 참석자는 성명서를 줄이는 데 잠정이 있다고 봤고, 6월 성명서에서는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빠졌다.

문제는 연준이 말을 줄일수록 한은의 계산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으면 달러화와 미 국제금리는 지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원화도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은은 이미 물가와 환율 부담 속에서 신중한 기조로 돌아섰다. 한은은 지난 5월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0.25포인트(p) 인상 의견을 냈다. 신 총재는 당시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며 향후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 폭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한미 금리차 부담은 길어진다. 이는 완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완화 약세는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은이 환율을 직접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환율이 물가로 번지는 경로를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본지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성료

황선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2026 백세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 모호한 가짜뉴스처벌법 '기업에 책임전가'

방통위, 개정안·가이드라인 발표 네이버·카카오·틱톡 등 9곳 대상 허위·조작정보 기준은 제시 안해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의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정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신고 접수와 삭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판단 책임이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과 천청사에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 말 기준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자로 지정된다.

올해대상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9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판단을 거쳐 삭제나 숨김, 가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정부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사실상 판단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플랫폼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뒤에도 불복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판단 기준

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1차 판단 책임을 플랫폼에 맡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미약판매나 불법 촬영물처럼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에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어디까지를 허위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내부에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표현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책임을 민간 플랫폼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실확인 단계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어 허위 여부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



## 주담대 최대 3억 제한... 가계대출 조인다

(KB국민은행)

국민·하나·농협·경남 은행 이어 신한은행, 주담대 일부 보증 중단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일부 보증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KB국민·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다.

MCI·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최대 5500만원, 경기도는 최대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청도 중단했다. 이달 모집인 채널 한도가 일주일 만에 모두 소진된 영향이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MCI·MCG 취급을 잇달아 중단하

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은 이달 1일, BNK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은행권의 자체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자율 규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 한 것이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선거소청 기각 지침에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임...위철한, 직권남용" /사진 뉴시스  
▲輿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홍근 "물가 年 2.3% 올때 교육교부금 6.5% ↑...재구조화해야"  
▲KBS '김민우착 의혹 보도' 5억대 소송 한동훈 1심 패소...6년만에 결론

▲홍준표 "장마철 되면 MB 4대강 사업 대단했다 생각...지류까지 했으면"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빠른 시일 내 공청회로 여론 수렴"